

1980년대 정부의 일본TV방송 전파월경 대책과 부산사회의 반응

윤 상 길*

| 목 차 |

- I. 머리말
- II. 1980년대 일본TV방송 전파월경의 상황과 정부의 대응
- III. 1980년대 일본방송 전파월경 대책에 대한 부산사회의 반응
- IV. 요약 및 결론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1980년대 부산지역 일본TV방송 전파월경의 객관적인 전체상을 정부의 대응책이라는 축과 이에 대한 (국내방송 뿐만 아니라 일본방송의 직접수신이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산업화되었던) 부산지역 유선방송업체와 부산시민의 반응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축을 통해 1980년대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을 살펴보려고 한 것은 전파월경이 만들어내는 경험이 특정한 국가의 역사적 맥락과 그 시공간을 관통하는 글로벌과 로컬의 역학에 의해 전혀 다른 인식과 감정을 생산해 낸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즉, 국가 권력에 의한 문화정체성 전략(전파월경 대책)과,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에 항시

* 신한대학교 미디어언론학과 부교수 / cyrus92@shinhan.ac.kr

적으로 노출되었던 부산이라는 주변의 ‘경계적 공간’ 안에서 벌어졌던, 지역적으로 특수한 다수의 역사적 현실과 다양한 인간 경험 사이에는 일정정도 괴리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음을 감안한 연구전략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바, 1980년대에 걸쳐 정부는 일본의 방송전파가 한반도에 침투하여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언론의 공세에 대응하고자 했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송출방식의 변경이나 방송출력의 증대, 방송국이나 중계소를 확충하는 등의 기술적 대응과 일본TV방송을 중계하는 불법적인 유선TV방송사업자를 단속하거나 ‘일본방송안보기 운동’ 추진과 같은 행정적 대응을 하였다. 그러나 탈식민지적 조건 속에서 일본의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화정책이 부재한 상황이었기에,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한 기술적·행정적 대응만으로는 일본TV방송의 전파 율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러한 괴리 현상은 부산 지역사회의 반응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인 현상 중의 하나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활발한 부산지역의 유선TV를 통한 방송콘텐츠의 소비였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와 언론에 의해 규범적인 언어로 제시되는 ‘왜색’(倭色)이라는 호명을 낯설게 느끼게 하는 주변부적 상황에서 비롯된 한국 방송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등장이었다. 그리고 부산민의 경계적 경험이 탄생시킨 대안적 인식은 1990년대 일본대중문화개방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 기여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주요어: 전파율경, 부산, 경계적 공간, 문화정체성, 유선TV방송

I. 머리말

1984년 1월 하순경, 대한민국은 ‘일본TV전파로부터의 침투’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떠들썩했다. 일본이 방송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후, 국내 신문들은 체신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전파감시를 강화하고 위성방송수신기의 시판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보도하면서, “별도의 수신장치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TV방송이 시청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당시 체신부 차관의 말을

인용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대해, 신문들은 뉴미디어인 위성방송전파에 대한 근본적인 묘책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본의 위성발사소식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일본 위성TV의 추진경과와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간략한 보도가 있는 이후) ‘일본TV전파의 국내침투’라는 이슈는 마치 그 현상이 사라지기라도 한 듯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이와 같은 1984년 초반기 일본TV방송 전파의 월경(越境, spill-over)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다지 새삼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없다. 1950년대부터 한반도는 사실상 일본방송의 권역에 속해 있어서, 특히 남해안 지역의 국민들이 손쉽게 일본방송을 듣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²⁾, 이로 인해 한국인들이 왜색(倭色)문화에 물들 위험성을 지적하는 신문기사가 종종 실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984년의 양상이 그 이전과 달랐던 것은 일본방송의 전파월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당국자들 사이에는 비교적 상당 기간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이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TV방송 전파월경 현상이 뉴미디어인 일본 위성방송기술로 인해 전국화될 우려가 있었던 것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984년 초반기 일본TV방송 전파의 월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위성방송이라는 뉴 테크놀로지가 야기할

1) ‘전파월경’ 현상은 ‘전파가 타국의 영토와의 경계를 넘는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을 살려 해석할 때, 통신전파의 월경, 단파라디오전파의 월경, 지상파방송전파의 월경, 그리고 위성방송전파의 월경 등으로 나뉜다(이상원, 『國際 直接衛星 放送의 電波越境에 대한 國際法的 統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2~17쪽).

2) 1950년대 한반도에서 청취가능했던 외국방송에 대해선 윤상길의 논문, 부산지역의 일본 라디오방송 청취에 대해선 최이숙의 논문, 그리고 195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부산지역의 일본 라디오/TV방송의 전파월경에 대해선 김성민의 책이 있다(윤상길, 『1950년대 서울중앙방송국 대외방송의 전개과정』, 『언론정보연구』 56-4, 2019. 최이숙, 『전후 1950년대 탈식민 도시 부산 그리고 라디오』, 『언론과 사회』 23-1, 2015. 김성민, 『일본을 禁하다: 금제와 욕망의 한국대중문화사, 1945~2004』, 글항아리, 2017).

국가의 문화정책성 훼손에 대한 정책적인 우려의 표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거칠게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세계화나 세계체제에 대해 논해온 관점에 있어서 문화란 흔히 내셔널한 틀을 역사적 ‘기원’에서 설명하는 것이거나, 혹은 국가의 정치경제적인 틀을 통해 조작되거나 강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리고 사무엘 헌팅턴의 주장처럼, 냉전 해체 이후의 세계화는 문화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문명의 단층선을 경계로 해서 분쟁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각 문화의 고유성에 조응한 세계의 분열이 아니라, 그러한 ‘고유의 문화’ 그 자체의 중층적인 분열이었다. 특히 위성방송이나 비디오, 인터넷 등과 같은 국경을 초월하는 미디어를 통한 이미지의 흐름과 항공 수송의 발달은 이러한 ‘고유 문화의 중층적인 분열’을 촉진하는 요인이었다³⁾. 또한 일본에 의해 개발되어 1980년대 말까지 활발하게 세계시장에 수출되었던 새로운 소비자용 매체기술(비디오 기기, 워크맨, 가라오케, 디지털카메라, 비디오테이프 등)의 탄생은 미디어 텍스트를 소비하는 시공간을 확장·이동시켜 다양한 정보와 이미지가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자본화를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주로 개발도상국 시청자들은 원래의 국내 미디어 상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고, 여러 나라 정부들은 해외 미디어로부터 ‘자국’ 시청자를 되찾기 위해서 국내 미디어산업의 시장화와 민영화를 추진해야만 했다⁴⁾.

이와 같이 자본화되는 월경 미디어를 통해 세계는 복잡하고 모순된 형태로 서로 연결되고 관계 맺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순수한’ 국가정

3) 吉見俊哉, 『カルチュラル・スタディーズ：思考のフロンティア』, 岩波書店, 2000, 박광현 역, 『문화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150~152쪽.

4) 이와부치 고이치 저, 히라타 유키에·전오경 역,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2004, 1/2장.

체성을 당연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서로 다른 문화가 뒤섞이면서 생기는 정체성의 이중성과 경계성, 중간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혼종성’(hybridity) 개념이 1990년대에 등장하였다. 이러한 세계화에 따른 문화정체성 변화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볼 때, 1984년 초 언론의 우려제기를 계기로 표면화된 1980년대 한국 정부의 ‘전파월경’ 대책과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에 노출되어있던 부산 지역사회의 반응은 기존 문화정체성의 중층적인 분열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이 대중적인 미디어로 성장하기 시작한 이래 전파월경은 전 세계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전파월경이 만들어내는 경험은 특정한 국가의 역사적 맥락과 그 시공간을 관통하는 글로벌과 로컬의 역학에 의해 전혀 다른 인식과 감정을 생산해 낸다. 아일랜드나 캐나다, 파키스탄, 대만 등의 국가들이 영국, 미국, 인도, 일본 등의 인접국가로부터의 전파월경을 민족과 국가정체성의 문화적 차원 상의 문제로 여기고 그 유통과 소비를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 전략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보자면⁵⁾, 일본의 식민지배를 경험한 한국의 국가권력이 1984년 초반기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에 대해 대응한 방식 또한 보편적인 현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1984년 이전부터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었던 부산이라는 주변의 ‘경계적 공간’ 안에서 벌어졌던, 지역적으로 특수한 다수의 역사적 현실과 다양한 인간 경험은 국가의 문화정체성 전략과 일정정도 괴리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와 같이 일본방송의 전파월경 현상이 가지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역사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일본방송이 한국방송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짧게 일본방송의 전파월경

5) 김성민, 앞의 책, 2017, 81~82쪽.

현상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본격적으로 학술적 탐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⁶⁾.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 현상이 단순히 언급되고 있을 뿐, 정작 일본의 어떤 방송이 어떤 강도로 부산의 어떤 지역에서 수신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조차 규명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왜색문화’의 온상이라는 부산지역에 대한 도덕적 비난, 즉 부산지역이 일본문화로부터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기존의 민족주의적 인식틀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이라는 현상을 기존의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한 걸음 비껴 나와 중립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문헌연구방법에 의거하여, 전파월경에 대한 주요 사료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1980년대 부산지역 일본TV방송 전파월경의 객관적인 전체상을 정부의 대응책이라는 축과 이에 대한 (국내방송 뿐만 아니라 일본방송의 직접수신이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산업화되었던) 부산지역 유선방송업체와 부산시민의 반응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자료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해 줄 자료인 국가기록원 문서를 활용하고, 보조적으로 주요 신문자료(중앙일간지 및 『부산일보』)와 잡지자료(월간『비디오무비』)를 활용할 것이다.

6) 박재용, 『한국 초기민간상업방송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최창봉, 『외국TV가 한국TV에 미친 영향』, 『우리 문화의 진단과 반성』, 문예기술사, 1985. 예외적으로 김성민(2017)의 연구에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 현상이 각 시기별로 검토된 바 있지만, 이 연구 또한 일본방송이 끼친 영향이라는 인식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으며, 주로 신문기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II. 1980년대 일본TV방송 전파월경의 상황과 정부의 대응

일본 열도와 가까운 부산 등지의 남해안은 1960년대 초반기부터 일본 TV방송이 선명하게 수신되는 사실상의 ‘일본TV방송의 방송권역’에 해당되었다.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은 이미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점차 1970년대에 들어 부산지역에서 전파월경을 통해 일본TV방송이 좀 더 일상적인 대중문화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⁷⁾, 1970년대 초부터 정부는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을 상쇄시키는 조치를 적극 취하기 시작했다. 전파월경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그 전파월경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1970년대 정부의 대응방식은 주로 송출방식의 변경이나 방송출력의 증대, 방송국이나 중계소를 확충하는 등 기술적으로 상쇄시키는 방식에 의존하였다. 또한 보조적으로 일본TV방송을 중계하는 불법적인 유선TV방송사업자를 단속하거나 ‘일본방송안보기 운동’ 추진과 같은 행정적 방식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전파월경에 대한 1970년대까지의 정부의 정책은 1971년 6월 중순 신문 보도를 통해 일본 대마도에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파중계탑이 1972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라는 사실⁸⁾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했다는 측면에서 1회성의 대중처방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정부의 전파월경 대책 또한 (1984년 1월 일본의 방송위성 발사 소식이 전해진 것을 계기로 했다는 사실에서 보자면)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탈식민적인 문화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취해진, 다분히 정치적이고 보여주기식의 대중처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의 대책은 1970년대보다는 훨씬 지속적으로 대책이 입안되고

7) 김성민, 앞의 책, 2017, 81~82쪽.

8) 『부산일보』 1971.6.14., ‘대마도에 전파등대’.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대중처방적 성격이 약했다.

1980년대 일본TV방송 전파월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대체로 일본이 방송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1984년 1월을 전후로 한 시기를 기준으로 그 대응방식과 대응양상에 있어서 대별된다. 우선, 1980년 이후 1983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 취해진 정부의 대책은 1980년 12월에 취해진 언론의 공영화 정책과 무관치 않은데 반해, (1984년 1월 중순 일본이 방송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2월 17일 체신부 순시시 “부산, 제주 등 남부지방 일부의 일본TV가시청지역을 점검하여 전파방해로 시청 못하게 할 것”⁹⁾이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이후의 대책은 주요 부처들 간의 긴밀한 협의과정과 좀 더 조직화된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1. 1983년 11월까지의 일본TV방송 전파월경 상황과 정부의 대응

1972년 10월 일본TV방송 전파월경에 대한 정부의 대책¹⁰⁾이 시행된 이후 추가적인 대책이 취해지지 않던 상황은, 12.12사태 이후 제5공화국 출범에 따라 한국 방송계의 공영화¹¹⁾ (1980년 12월 언론통폐합과 12월 1일 컬러TV방송의 전격개시)가 추진되는 틈바구니 속에서 변화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언론통폐합 조치 이전의 상황에서 수립된 제2차 난시청해소 4개년 계획(1979~1982)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거쳐 새로운

9)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9, 『대통령각하, 체신부순시시 지시사항(84.2.13.)』, 『일본방송관계』, 155쪽.

10) 1972년 10월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일본의 방송송출인 수직편파방식을 취했던 TBC-TV의 ‘수평편파’ 표준화였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방송3국의 출력을 증강시켜 5Kw로 맞추고 채널도 일본TV방송채널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시킴으로써 부산지역 시청자들의 시청방향을 일본TV에서 국내TV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11) 언론통폐합 조치와 그 직후의 언론기본법 제정은 ‘전일적(全一的) 공영제’를 근간으로 하는 1980년대 한국방송체제의 성격을 규정짓는 핵심적인 사건이었다. 조항제, 『방송산업의 성장과정』, 『한국 언론산업의 역사와 구조』, 연암사, 2000.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망 확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의 사업을 2차 년도인 1980년에 종결시키기로 결정했는데¹²⁾, 아마도 이 결정은 1980년 6월 7일 관계부처(체신부, 문화공보부, 안기부)의 협의에 의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날 회의에서는 전반적으로 난시청상황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일본방송 전과월경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이 논의되었다.

1980년 6월 7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정되어 13일에 시행된 대책의 요체는 부산지역 민간방송(TBC-TV와 MBC-TV)의 방송시간 연장이었다. 즉, 기존에는 오후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었던 방송시간을 오전 정규방송(06:00-10:00)과 패턴방송시간(10:00-16:10), 저녁 정규방송(17:00-24:00)으로 연장한 것인데¹³⁾, 특히 “침투강도가 강한 부산지역에 출현되는 일본TV방송 뉴스 및 저속프로그램의 차단을 위해 VHF채널에 한해 정규방송 휴지시간 중 ‘테스트 패턴’(Test Pattern)을 발사”¹⁴⁾하여 대응한 방식은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새로운 방식이었다. 이와 같이 1970년대 말까지도 전국적인 가시청권이 KBS-TV에 비해 비교적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¹⁵⁾ 민영방송의 방송시간

12) 송재극·최순룡, 『한국방송기술사』, 방송문화진흥회 편, 『한국방송총람』, 나남, 1991, 1411~1412쪽.

13)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일본티비 방송과 저지 대책 추진계획』, 『일본TV혼신』, 1984, 방송과, 8쪽.

14)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한일 주파수 조정회의자료』, 『일본TV혼신』, 방송과, 1986, 244쪽. 그리고 이 방식은 그 저지효과의 확인을 위해 1984년 6월 5일부터는 일본TV 방송시간 전 시간에 대해 컬러바(Color-Bar)를 발사하였고, UHF채널에 대해서도 1984년 6월 5일부터 인접채널로 운용되고 있는 부산3TV(CH 24) 시설을 이용, 일본방송시간 중 컬러바를 발사하여 간접적으로 지지하였다(245쪽).

15) 방송공영화 이전에는 정부가 민간방송의 시청취지역 확대를 장기간 동안 동결시켜왔기 때문에 MBC의 가시청권은 국토의 43%, 인구의 60%에 그치고 있었으며 강원도와 충북지역은 도 전역이 MBC의 불가시청 지역이거나, 기존 시청취 가능지역도 출력이 약해 TV방송의 수신상태가 불량한 실정이었다(최창섭, 『방송원론』, 나남, 1985, 212쪽).

을 연장한 정책적 판단은 아마도 시청자가 흥미를 끝만한 오락방송으로 편성, 운영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정화운동이 펼쳐지는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980년 7월 4일 부산시는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일본TV안보기 계몽운동’을 펴는 한편 공동안테나를 가설해주는 불법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부산시의 이 같은 조치는 무허가유선 수신사업자들이 호텔, 아파트, 일반주택 등에 공시청특수안테나를 4만, 5만원씩 받고 불법 설치, 일본 TV방송의 저속한 프로 등을 시청하도록 해 시민정서를 해치고 시민총화를 저해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조치였다. 부산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1차로 7월 말까지 주택에 설치된 수직편파안테나 등 일본TV수신용 안테나를 자진철거토록 계몽하고 2차는 연말까지 계속 계몽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본TV안보기 계몽활동에 행정조직과 부산시 교위, 각기관기업체, 봉사단체도 나서도록 하는 한편, 구청과 출장소 별로 11개 단속반을 편성, 무허가 유선방송업자를 단속,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¹⁶⁾. 다른 한편, 언론통폐합이라는 새로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방송망 확장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보이는 조치로서, 정부는 1981년 3월부터 1983년 11월까지 기간방송국들을 신설하거나 기존 방송국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표 1>과 <표 2>, <표 3>과 같다.

<표 1>일본방송 전파월경 차단을 위한 기간국 신설¹⁷⁾

방송국명	채널	출력(Kw)	운용개시일	차단방송
KBS부산3TV	CH24	30	81.3.12.	KTN나가사키
KBS망운산3TV	CH23	30	81.3.12.	KTN나가사키

16) 『경향신문』 1980.7.4. ‘日TV 안보기運動, 釜山—不法有線放送행위 단속’.

17)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9, 『일본티비방송 차단 강화대책 회의자료(1984.5.18.)』, 『일본방송관계』, 전파관리국, 176쪽.

<표 2>일본방송 전파월경 차단을 위한 기존방송국의 변경¹⁸⁾

방송국명	채널	출력(Kw)	허가일자	차단방송
KBS부산2TV	CH11→CH7	5→10	83.7.변경허가	NHK총합
MBC부산TV	CH12→CH11	5→10	83.7.30.변경허가	NBC나가사키
MBC마산TV	CH13	1→5	83.11.18.변경허가	NHK교육
KBS울산TV	CH2→Ch34	0.1→10	83.8.30.변경허가	FBS구마모토

<표 3>일본방송 전파월경 차단을 위한 간이TV중계소 신설¹⁹⁾

방송국명	개수	지역	비고
KBS-1 TV	16	부산동상동(채널4, 10W), 부산부용동(채널13, 100W), 부산배산(채널13, 100W), 부산초량(채널13, 1W), 창원진전(채널4, 1W), 거제(채널5, 1W), 충무(채널10, 10W), 사천(채널10, 10W), 마산산호(채널11, 10W), 삼천포(채널12, 100W), 장승포(채널4, 10W), 당항(채널9, 10W), 가두봉(채널4, 10W), 울진(채널13, 10W), 울릉(채널12, 10W), 은정(채널12, 1W)	
KBS-2 TV	2	천마산(채널47, 100W), 황령산(채널49, 500W)	가허가국 (84년10월 준공예정)
KBS-3 TV	4	충무(채널19, 100W), 마산산호(채널49, 100W), 천마산(채널53, 500W), 황령산(채널59, 500W)	가허가국 (84년10월 준공예정)
MBC-TV	2	황령산(채널43, 500W), 천마산(채널41, 100W)	가허가국 (84년10월 준공예정)

18)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일본티비 방송과 저지 대책 추진계획』, 『일본TV혼신』, 방송과, 1984, 8쪽;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9, 『일본티비방송 차단 강화대책 회의자료』, 『일본방송관계』, 1984, 전파관리국, 179쪽.
 19)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9, 『일본티비방송 차단 강화대책 회의자료』, 『일본방송관계』, 전파관리국, 1984, 176쪽. 이 자료는 이미 1981년 무렵부터 방송관계자들이 부산지역의 일본방송의 전계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화대책 회의자료>에 수록된 자료인데²¹⁾, 부산지역은 ‘연간계속 침투지역’이었고, 그 밖에 남해안과 동해안 연안은 ‘4~10월 간헐적으로 침투’하는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표 4> 일본TV방송의 실측 전계강도 현황

일본티비방송 실측 전계강도

당부 및 KBS 측정(87,82년7,8월)

측정지점	NHK 종합 (CH5)	NBC 장기 (CH9)	NHK 교육 (CH11)	KTN 장기 (CH22)	구 마모도 TV (CH34)	NBC 후쿠오카 (CH6)
부산택종대	63dB (42)	56dB (44)	67dB (40)	46 dB (35)	30dB	
부산해운대	45 (26)	47 (27)		32 (20)		
울산병이천	23	24	24	24	27	
마산만월동	22	25	16			
충무읍남동	20	22	15			
어수 자산동	12	37	43		27	
영일군 저평면						27
영덕군 임해면			30			
울진군 울진읍		26				
울진군 기성읍		25				
울진군 울릉읍		38				
울진군 온정면						20

21)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9, 「일본티비방송 차단 강화대책 회의자료」, 『일본방송관계』, 1984, 180쪽.

2. 1984년 1월 이후 일본TV방송 전파월경 상황과 정부의 대응

1984년 1월 중순경, 일본이 방송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후 국내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일본문화 국내 침투에 대한 우려표명이 계기가 되어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외무부, 상공부, 체신부, 문화공보부 간의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²²⁾. 그리고 급기야 2월 17일에 전두환 대통령의 대책마련 지시가 내려지자, 1984년 말까지 안기부를 비롯하여 체신부, 문화공보부, KBS, MBC 등 주요 부처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²³⁾.

우선, 부산, 제주 등 남해안 지역에 출현하는 일본TV방송 봉쇄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관계관 회의가 5월 18일에 개최되었다²⁴⁾. 앞의 <표 4>와 <그림 1>의 자료가 제시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즉, “국내 방송시간에는 거의 일본 방송과 차단이 가능하나 지형적인 차폐로 국내 방송과가 미약한 일부지역에서는 차단이 불가”하고 “국내 방송 정파시간 중에 차단 불가”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두 가지 대책이 제시되었다. 첫째 간접적 차단방안은 (이미 그 이전시기부터 강구되었던 바 있는 바) 소출력TV중계소를 신설하는 안으로, 일본 방송과 가능한 동일 또는 인접채널로 허가하여 난시청 해소로 국내 방송으로 유인하는 것이었다²⁵⁾. 둘째 직접적 차단방안의 1안은 기존 TV

22) 대책회의의 주된 내용은 위성방송 수신기를 수입감시품목으로 지정고시하여 국내 반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은 수출용에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9, 『일본 위성방송 국내 시청에 대한 검토』, 『일본방송관계』, 1984, 84쪽).

23)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9, 『대통령각하, 체신부순시서 지시사항』, 『일본방송관계』, 1984, 155쪽.

24)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9, 『일본티비방송 차단 강화대책 회의자료』, 『일본방송관계』, 전파관리국, 1984, 175~178쪽.

25) 이러한 방안으로서 총 6개국의 소출력TV중계소가 신설예정이었는데, 주로 남해안과 울릉도 지역에 초점을 두었다. 그 주된 채널과 지역으로는, KBS-2TV(여수구룡, 마산 산호), KBS-3TV(울릉, 가두봉), MBC-TV(충무, 마산 산호)였다.

방송국의 주파수를 변경하고²⁶⁾ 제2안은 기존 방송국의 방송시간을 필요한 만큼 연장하는 안이었다.

이날 관계부처 관계관 회의시 논의되었던 침부사항에 대하여, 체신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적극적인 추진협조 요청이 있어서 관련사항을 KBS와 MBC에 통보하였다²⁷⁾. 향후저지계획에서는 지역별로 침투되는 일본TV방송과를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는 저지계획을 수립,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안전하게 저지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체신부는 전파관리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내무부와 문화공보부에서는 사회, 문화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였다²⁸⁾. 이에 방송과 실태조사의 경우엔, 2회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일본TV전파가 가장 강하게 침투하는 하절기(7-8월)에 중점 조사 실시하고, 1차 조사는 정밀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표본조사(지역방송국, 우체국, 시청 등을 통한 자료수집), 2차 조사는 지역별로 전계강도를 조사하기로 하고, 침투 주파수별 저지효과를 분석하여 저지 대책(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주된 내용은 방송시간 변경방안(84.6.15일부터 시행예정)과 주파수 변경 및 출력증강방안, 방송중계소 신설방안, 소요예산과 소요기간 등으로 하며, 이 대책안을 관계기관(안기부, 문화공보부, 방송사)과 협의하기로 하였다²⁹⁾. 이러한 대책추진계획에 입각하여,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관련된 조치들이 취해졌다.

1984년 5월 30일에는 대북심리전 단장인 안기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26) 그 주된 계획은 KBS부산TV를 채널9에서 채널13으로, MBC마산TV를 채널13에서 채널9로, KBS부산3TV를 채널24사에서 채널23으로, 그리고 KBS망운산2TV를 채널23에서 채널24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27)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일본티비 방송출현 봉쇄 강화」, 『일본TV혼신』, 1984, 3쪽.

28)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일본티비 방송과 저지 대책 추진계획」, 『일본TV혼신』, 방송과, 1984, 11쪽.

29)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일본티비 방송과 저지 대책 추진계획」, 『일본TV혼신』, 1984, 방송과, 12쪽.

(체신부, 문공부, KBS, MBC)과 합동회의를 가지고, 1) 1984년 6월 15일부터 부산, 마산지역 TV방송국 운용시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2) KBS 부산3TV의 채널을 기존 24번에서 23번으로 변경하였다³⁰⁾.

1984년 7월부터 8월까지 일본TV방송과 침투실태조사가 실시되어, 부산 등 11개 지역 113개 지점을 대상으로 일본 TV방송과의 전계강도를 측정하고 국내방송파에 의한 일본 방송파 저지실태를 조사하였다³¹⁾. 이 조사에서는 일본방송 시청가구 수, 즉 일본 방향으로 옥외 공중선이 설치된 가구 수에 대한 파악 뿐 만 아니라, 차단 강화를 위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³²⁾. 조사결과, 국내 방송에 관계없이 부산에서 수신가능한 일본TV방송은 총 3개 채널(23, 35, 43)이었고, 국내방송 사각지대로서 일본방송파가 침투하는 부산지역은 11개동, 약 28,000가구였다³³⁾.

1984년 10월 24일에는 전파관리국장이 주관하는 관계기관(안기부, 문공부, KBS) 합동회의를 개최한 결과, 체신부가 작성한 지역별 저지대책(안)에 대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였다³⁴⁾. 실측 전계강도 자료와 그 간의 방안들을 참고해 체신부가 종합적으로 작성한 저지대책안에는 부산을 비롯하여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서의 일본방송 전파월경에 대한 폭넓은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안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30)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9, 「남해안지역 일본 TV방송과 저지대책」, 『일본방송관계』, 1984, 전파관리국, 128쪽.

31)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9, 「남해안지역 일본 TV방송과 저지대책」, 『일본방송관계』, 1984, 전파관리국, 1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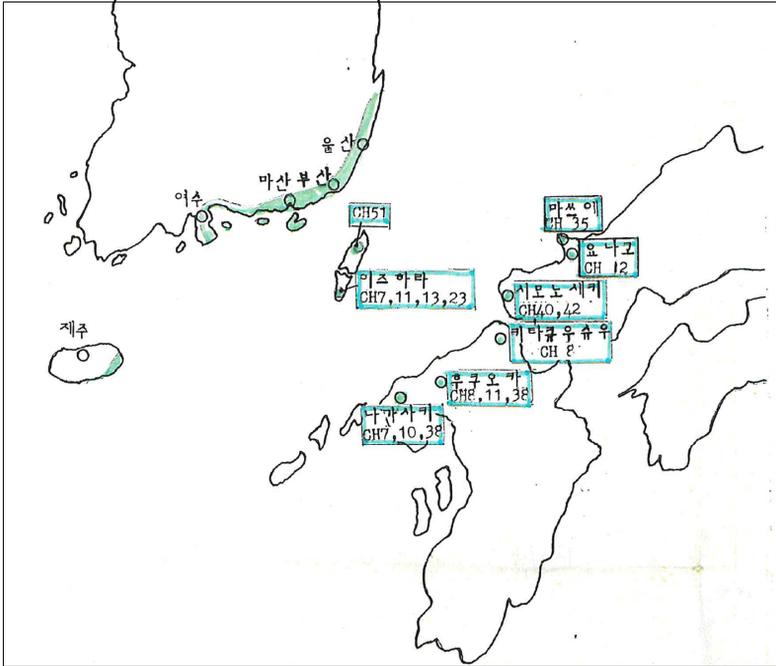
32)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일본티비 방송전파 침투 실태조사」, 『일본TV혼신』, 1984, 19~22쪽.

33)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남해안 일대 일본TV방송차단 대책 추진경위」, 『일본TV혼신』, 1984, 70~71쪽.

34)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9, 「남해안지역 일본 TV방송과 저지대책」, 『일본방송관계』, 1984, 전파관리국, 128쪽. 그 밖에도 이 날 회의에서는 KBS는 체신부 저지대책(안)보다 저지효과 면에서 더 우수한 대책이 있을 경우 별도의 대안을 제시토록 하였다. 이에 대해 1984년 12월 2일 KBS는 체신부의 저지대책대로 추진할 것을 회신하였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³⁵⁾.

<그림 2>일본방송 전파월경의 일본 내 송신소 위치



우선 일본방송 전파월경의 현황을 살펴보면, 1) 일본 TV방송파의 침투지역은 한일 간 전파경로가 양호한 해상에 인접된 남해안과 제주도의 일부지역이고, 2)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TV 방송파는 대마도에 위치한 방송중계소(NHK, NBC, KTN)와 일본 본토의 후쿠오카, 나가사키, 기타큐슈 등의 송신소에서 방사되는 것이며³⁶⁾, 3) 침투방송

35)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일본티비 방송전파 침투 실태조사』, 『일본TV혼신』, 105~112쪽. <그림 2>의 출처는 다음의 문서임.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남해안 지역 일본TV방송파 저지대책』, 『일본TV혼신』, 1984, 87쪽.

과의 전계강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부산, 울산, 거제 및 마산 지역이 비교적 강하고 기타 지역은 미약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가 심하고, 4) 침투하는 방송파는 총 24개 채널이나 10개 채널만 시청가능하며 계절적인 영향을 받아 부산지역은 상시 출현되나 기타 지역은 하절기(6-9월)에만 침투된다는 것이었다³⁷⁾. 특히 부산지역의 상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1) 침투채널은 총 8개 채널로 연중 상시 시청가능한 채널은 4개 채널(CH7, 11, 13 및 23)이며, 기타 채널은 시청 불가능하고, 2) 침투지역은 해안과 내륙의 고지대 등이며 특히 해운대, 영도, 송도동의 지역은 침투세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기존의 저지실태로는 1) CH7, 11은 국내방송파로 양호하게 저지되지만, 2) CH13은 MBC 마산TV 방송파가 미약한 사각지대를 발생시킴으로 일부지역에서 저지

36) 월경하는 일본TV전파의 송신지로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앞의 문서, 117쪽. 아래 표에서 KTN는 (주)테레비나가사키, BSS는 (주)山陰방송, TSK는 山陰중앙텔레비전 방송(주), FBS는 (주)福岡방송을 의미함. 이에 대해선 다음의 문서 참고바람. 국가기록 원문서 DA1259648, 「남해안 지역 일본TV방송파 저지대책」, 『일본TV혼신』, 1984, 80~81쪽.

채널	방송국명	위치	출력(KW)	비고
CH7(5)	NHK 종합	대마도 (권리산)	0.3	
CH11(9)	NHK 교육	"	"	
CH13(11)	나가사키NBC	"	"	
CH23(22)	KTN나가사키	"	"	
CH12(10)	BSS요나고	요나고	10	
CH24(23)	미상			
CH35(34)	TSK마쓰에	마쓰에	10	
CH38(31)	FBS후쿠오카	후쿠오카	30	
CH40(39)	NHK종합	시모노세키	1	
CH51(50)	미상	대마도	미상	

* 방송채널은 우리나라 채널을 기준함.

() 내는 일본 해년

37) 위의 문서, 107쪽.

가 미흡하며(해운대, 영도, 송도 등), 3) CH23은 KBS부산3TV의 인접채널(CH24)로 저지하기 때문에 저지상태가 미흡하다고 파악되었다³⁸⁾ (<표 5>참고). 또 저지상태가 미흡한 채널13에 대해선 KBS매산 간이TV중계소(CH13, 100W)를 장사봉으로 이설하고 출력은 500W로 증강시키고, 채널23에 대해선 KBS부산3TV(CH24, 30Kw)의 채널을 24번으로 변경하는 안을 수립하였다³⁹⁾.

<표 5>부산지역 일본TV방송 전파월경 현황과 저지실태⁴⁰⁾

지역	일본TV방송				국내대응방송		차단 실태
	침투 기간	채널	침투지역	시청가능 여부	채널	방송국명	
부산 (8과)	상시	CH7	해안지대 내륙고지대	시청가능	CH7	KBS부산2TV, 10Kw	완전차단
	상시	CH11	"	"	CH11	MBC부산TV, 10Kw	"
	상시	CH13	"	"	CH13	MBC매산TV, 5Kw	차단미흡
	상시	CH23	"	"	CH23	KBS부산3TV, 30Kw	차단미흡
	하절기	CH35,3 6,43,52	해안지대 내륙고지대	시청불가			

이 체신부의 저지대책(안) 시행계획에 대해 문화공보부의 의견이 10월 31일에 접수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1) 부산지역에 상시침투하는 일본 방송파(채널12)는 85년 말까지 저지하고, 2) 여수지역 간이TV중계소(채널12)는 85년 하절기(6월-9월)부터 방송시간을 연장하고, 3) 기타지역의 저지대책으로서는 제2차 방송망 확장계획(1986~1990)에 우선 반영하고, 노후 시설 대체 및 채널변경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조치한

38) 앞의 문서, 1984, 108쪽.

39) 위의 문서, 116쪽.

40) 위의 문서, 113쪽.

다는 것이었다⁴¹⁾.

또한 체신부가 11월에 작성한 저지대책에 의하면, 부산시의 협조를 통해 지난 1980년에도 실시한 바 있는 ‘일본TV안보기운동’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좀 더 조직화되고 정교화된 방식, 즉 이미 조사된 고성능 안테나 자료를 토대로 한 철거 계몽운동을 펼쳤다. 즉, “일본TV방송 시청을 목적으로 단독주택, 아파트, 호텔 등에 일본방향으로 설치된 고성능 수신안테나를 반상회를 통해 주민계몽”함으로써 “정부차원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을 통해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도록 했다⁴²⁾.

<표 6> 1984년 10월 부산지역 일본TV 방송수신용 안테나 철거계몽 실적⁴³⁾

(설치수/철거수) 84.10.31 현재 부산시 통계

구분	일반 주택	아파트	호텔	여관	기업체	기타	계	철거율 (%)
중구	139 /66	110 /3	3	13	2	11 /7	278 /76	27.3
서구	371 /358	290 /192	3	65 /14	2	13 /11	744 /575	77.3
동구	469 /431	3 /3	5 /5	32 /19			509 /458	90.0
영도구	164 /164	250 /250		3 /3	3 /3	4 /4	424 /424	100
부산진구	230 /230	70 /68		17 /16		2 /2	319 /316	99.0
동래구	139 /134	16 /16	1 /1	21 /17	1 /1	20 /18	198 /187	94.0

41)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남해안 일대 일본TV방송차단 대책 추진경위』, 『일본TV혼신』, 71쪽;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일본TV방송 저지대책』, 『일본TV혼신』, 체신부, 1984, 125쪽.

42)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일본TV방송 저지대책』, 『일본TV혼신』, 체신부, 1984, 125쪽.

43) 앞의 문서, 122쪽

남구	935 /314	241 /77	1 /1	11		12 /7	1,200 /399	33.0
해운대구	386 /328	202 /191	1	9 /2	5 /3	21 /20	624 /	87.2
사하구	300 /278	312 /251		1 /1			613 /530	86.4
계	3,133 /2,303	1,494 /1,051	14 /7	172 /72	13 /7	83 /69	4,909 /3,509	
칠거율 (%)	73.5	70.3	50.0	41.9	53.6	83.1	71.5	

12월 11일 기획관리실이 ‘통신사업 증장기 보고’를 할 때, 대통령에게 보고한 <남해안지역 일본TV방송과 저지대책>에서는 “아국 방송의 주파수 변경, 출력증강 및 방송시간연장(정규방송시간 외 패턴방송) 등 조치로 대부분 저지되고 있으나, 주파수의 차이, 산악 등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방송 시청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추가적인 저지계획으로서 부산지역의 경우 “1985년에 1개 채널을 변경하고, 1개 중계소의 위치를 이전하여 완전 저지”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월경의 근원적 해결, 즉 외교적 교섭을 통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의 일본방송 전파월경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1983년에 측정된 전계강도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일본TV방송의 전계강도가 더 강하게 측정되고 있는 상황이었다⁴⁵⁾.

44)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남해안 지역 일본TV방송과 저지대책」, 『일본TV혼신』, 1984, 77쪽.

45)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남해안 지역 일본TV방송과 저지대책」, 『일본TV혼신』, 1986, 전파관리국, 218쪽;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한일주파수 조정회의 협의사항」, 『일본TV혼신』, 전파관리국, 1983, 64쪽.

이에 1986년 3월에 작성된 전파관리국의 <남해안 지역 일본 TV방송과 저지대책>에 의하면⁴⁶⁾, 일본 NBC의 채널13번 전파월경에 대응하여 추가적으로 MBC마산TV를 위해 부산 용호동에 중계소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985년 7월 가허가를 내주어 1986년 12월 완공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일본 KTN(테레비나가사키)의 채널23번 전파월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6년 2월 7일 추가적으로 KBS부산3TV를 시험방송하였고, 86년 6월에 완공할 대책을 세웠다⁴⁷⁾.

이와 같이, 1984년 이후 집중적으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 현상에는 변함이 없었다. 전파월경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내 수신되는 일본TV방송 전파의 전계 강도를 낮추는 외교적 해결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동일주파수 대역에 월경되는 방송채널에 대응하여 높은 방송출력의 채널을 대응하는 방식만으로 부산지역 시청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었던 탓에 부산민들은 언제나 마음만 먹는다면 가히 어렵지 않게 일본TV방송을 접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경로인 유선TV방송을 선택할 수 있었다.

III. 1980년대 일본방송 전파월경 대책에 대한 부산사회의 반응

1970,80년대 정부의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이 항시적으로 상존했던 부산지역은 사실상의 ‘일본TV방송의 방송권

46) 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남해안 지역 일본TV방송과 저지대책』, 『일본TV혼신』, 전파관리국, 1986, 202쪽.

47) 위의 문서, 206쪽

역'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국가권력이 일본TV방송 전파월경 문제를 민족과 국가정체성의 문화적 차원 상의 문제로 여기고 그 유통과 소비를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지만,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었던 부산이라는 주변의 '경제적 공간' 안에서 벌어졌던, 지역적으로 특수한 다수의 역사적 현실과 다양한 인간 경험은 국가의 대응전략과 일정정도 괴리가 있었다. 이러한 괴리가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 중의 하나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활발한 유선TV를 통한 방송콘텐츠의 소비였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와 언론에 의해 규범적인 언어로 제시되는 '왜색'(倭色)이라는 호명을 낫설게 느끼게 하는 주변부적 상황에서 비롯된 한국 방송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등장이었다.

1. 유선TV방송을 통한 일본TV콘텐츠의 수용

부산시민들은 오랜 기간 비교적 손쉽게 일본TV방송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TV방송을 통해 다양한 TV콘텐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는데, 그 주된 경로 중의 하나는 일본TV방송을 중계하는 유선TV방송이었다. 197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공시청방식의 유선TV방송이 등장하던 상황에서⁴⁸⁾,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성립 불가능한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일본TV방송을 중계하는 유선TV방송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미 컬러방송을 하고 있었던 일본TV의 방송콘텐츠는 기존 수직편파방식⁴⁹⁾의 안테나를 통한 시청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

48) 윤상길, 『1970년대 한국 유선방송의 이행기적 양상』, 『언론정보연구』 56-1, 2019.

49) 수직편파(vertically polarized wave)는 편파면이 대지와 수직으로 되어 있는 전파로 수직 안테나로부터 방사되는 전파이다. 수직편파의 전파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수신 안테나의 소자를 수직으로 하여야 한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편, 『방송용어사전』, 한국방송개발원, 1990, 556쪽.

의 유선방송을 통한 시청을 자극하는 요인이었다.

1980년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는 AFKN의 컬러화(1977.7.1.)와 국내 방송의 컬러화(1980.12.1.)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 컬러TV수상기의 국내시판도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컬러영상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다. 특히 언론에서는 “일본 컬러TV방송의 부산 및 남해안 지역으로의 무단상륙으로 인해,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서는 ‘컬러TV가 흑백TV를 압도’하고 있다”⁵⁰⁾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국내방송의 컬러화가 단숨에 부산지역의 일본TV콘텐츠 수용을 일소시킨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국내방송의 컬러영상이 일본방송에 비해 선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80년 12월 1일 컬러TV방영이 시작된 이후에도 “부산과 경남 해안지방 등의 일본TV영상의 침투확산은 컬러TV수상기 자체의 성격과 구입 과정의 부수적인 여건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던 것”⁵¹⁾이다.

현재의 KBS제1TV의 경우, 부분 컬러에 그나마도 시험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반면 일본의 TV는 완벽한 컬러 영상을 강렬하고 선명하게 보내오고 있으며, 특히 UHF채널은 24시간 계속 시청이 이 지역에선 가능하다. TV 판매상에서도 공공연히 일본TV의 화려한 컬러색상으로 고객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컬러TV를 구입한 이들도 계속적인 시청욕구와 호기심으로 일본의 컬러TV를 찾게 되는 것이다⁵²⁾.

또한, 국내방송의 컬러화는 부산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유선방송인

50) 『경향신문』 1980.11.12., ‘컬러TV時代(下), 12월 放映앞두고’.

51) 『부산일보』 1980.12.8., ‘부산·경남 지역, 컬러TV방송 부작용, 안방에 일본영상 침투’.

52) 『부산일보』, 위의 기사.

유선비디오방송이 등장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윤상길의 연구에서는 다음의 신문기사를 근거로 하여, 1980년 12월 무렵 등장한 소위 ‘비디오다방’을 한국 최초의 유선비디오방송으로 평가한 바 있다⁵³⁾. 1980년 당시 부산지역 대중업소에서는 비디오 기기로 일본 TV프로그램을 틀어주는 것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고, 특히 “VTR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는 소위 ‘비디오다방’이 생겨나기도 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⁵⁴⁾,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다방 등과 같은 대중업소를 주요 고객으로 하여 등장한 유선비디오 방송업체가 부산에서 최초로 등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 것이다.

컬러텔레비전이 방영되기 시작한 뒤부터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다방에서 일본말과 일본선전노래가 담긴 일본TV필름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업소 측에서 비디오를 설치해 놓고 시내 다방끼리 서로 연결, 유선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업소 측에서는 단순히 흥미 측면에서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족한 것이다. 컬러가 방영되기 전부터도 **부산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일본TV 시청이 주체의식을 손상케 하는 행위라고 비판받아 왔었다⁵⁵⁾.

이렇게 본다면, 1980년대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수립과 실행에도 불구하고 일본TV방송의 전과월경은 비디오기기와 결합됨으로써 굴절·우

53) 윤상길, 『1980년대 전반기 한국 유선비디오방송 ‘붐’의 미디어사적 맥락』, 『언론정보연구』 57-1, 2020. 기술적 방식을 근거로 한 유선방송의 발전단계로 보자면, 유선비디오방송은 기존의 중계방식의 제1세대 유선방송에 탈피하여 VTR기기를 이용하여 자체방송을 하는 제2세대 방송형태이다.

54) 『비디오무비』 1991.12. 281면, ‘한국비디오 10년사 제4화: 무질서 비디오시장에 음반법 개정 회오리’.

55) 『경향신문』 1980.12.25., ‘다방서 日비디오 방영 웬말’.

회되었던 것이다. 결국, 일본에 의해 탄생된 새로운 소비자용 매체기술인 비디오 기기가 유선비디오방송의 형태로 변용되어, 일본의 방송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공간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1981년 당시 부산 지역의 공시청방식 유선방송업체 수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았는데 당시 시 단위로는 전국의 50% 이상의 업체가 부산지역에 있었다⁵⁶⁾. 이 무렵 등장한 유선방송업체 중 상당수는 (일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본TV방송을 중계하는 중계유선방송업과 (상점이나 호텔 등의 가입자를 상대로 한) 유선비디오방송업을 겸업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첫째 상대적으로 고가인 VTR 기기 없이도 선명한 컬러영상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둘째 전파 월경에 의한 일본컬러 TV방송의 직접수신·중계수신의 역사가 깊었던 지역적 조건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프로그램을 녹화·복사하여 유통시키기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⁵⁷⁾. 이에 따라, 1986년 12월 당시 부산은 업체 수에 있어서나 가입자 수에 있어서도 유선비디오방송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었다⁵⁸⁾. 이러한 부산지역 유선TV방송업의 비약적 성장에는 1980년대 말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난시청 문제도 일정부분 작용했을 것이다. 1989년 당시 해운대구 반송2동의 경우, 전체 31개통 중 24개 통이 난시청지역이어서 주민들의 60% 이상이 유선방송을 통해 TV시청을 하고 있고⁵⁹⁾, 동구 수정동의 경우에도 총 24개통 중 9개통이 이 일대 지형과 고층 건축물 등

56) 김명옥, 『韓國 CATV導入活性化를 위한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48쪽.

57) 1981년 무렵에 이르면, 당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부산 중심가의 비디오테이프 가게에는 일본TV프로그램 복사판이 많아져, 시중 비디오테이프 가게의 물건 중 거의 50% 정도가 일본제작의 연예물일 정도였다. 관계자들의 추정대로, 이것의 출처는 대부분이 부산 부근의 해안에서 녹화된 것의 복사판이었다(『동아일보』 1981.7.7. ‘부산, 일본TV시청 많다.’).

58) 윤상길, 앞의 논문, 2020, 66쪽.

59) 『부산일보』 1989.2.18., ‘내마을 民願중계>4<盤松2동’.

에 가려 난시청 지역이 되고 있었다⁶⁰). 비록 1980년대 중반보다는 그 수가 감소되긴 하였으나⁶¹), 이러한 부산의 난시청 문제는 많은 부산민들을 유선방송의 가입으로 여전히 내몰았던 요인이었다.

2. 정부의 전파월경 대책에 대한 부산민의 반응

1970,80년대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와중에도, 부산시민들의 일상적인 일본TV방송 콘텐츠 수용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주기적으로 시행되었던 ‘일본TV안보기’ 운동이다.

1979년 10.26사태 이후 반상회를 통해 ‘일본TV 안보기 운동’을 벌이고 또 1980년에 이어 1981년에도 이 운동은 꾸준히 전개되어 일정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시의 집계에 따르면, 1980년 6월 말 부산시내 일본TV안테나 설치 수는 10,155개소, 일반 주택이 68%(8,832개소), 아파트 26%(2,644개소), 호텔·여관 2.6%(269개소), 기업체 1.5%(158개소), 기타 2.5%였다는 분석되었는데, 1980년 7월부터 연말까지 在釜기관·단체 443개소가 협조해 캠페인을 벌인 결과 50.2%가 철거되고, 맨션아파트·호텔·여관·기업체 등 아직 1,784곳이 남아 있었다⁶²). 그리고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1984년 당시 부산지역 일본TV 방송수신용 안테나 철거계몽의 대상이 된 안테나가 4,909개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도 볼 수 있다.

60) 『부산일보』 1989.4.5., 「내마을 民願중계>13<水晶 3동, TV 難視聽에 슬럼화 加速」.

61) 1989년 당시, 부산에는 47개 유선방송사가 있으며 1개사마다 1천여세대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부산일보』 1989.3.31., ‘일부 ‘有線방송’ 횡포 극심’).

62) 『경향신문』 1981.8.12., ‘일본 그림자(2): 부산항의 TV오염’.

그렇지만, 당시 언론은 ‘일본TV 안보기 운동’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유선방송의 대체경로 때문이었다.

제작년 10.26사태 이후 반상회를 통해 ‘일본TV 안보기 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고 어떤 주민은 말했다. 특수 안테나가 없다고 해서 전혀 일본TV를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설치비 10만원이면 일본TV방송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유선방송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파 밀폐업자라고나 할까⁶³⁾

두 번째는 1980년 6월 7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13일에 부산지역 민간방송(TBC-TV와 MBC-TV)의 방송시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편파방식의 안테나를 설치한 가정이나 업체는 낮 시간 동안 선명한 일본컬러TV영상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아래의 신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론 국내 방송이 방영되는 시간에는 일본TV 방송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역이나 날씨에 따라 양국의 방송이 겹쳐 보일 때도 있었고, 국내 방송이 정전 등의 사고로 인해 정파(停波)되면 일본TV를 볼 수밖에 없었다.

부산에서 일본TV수신용 안테나철거를 호소하는 ‘일본TV안보기’ 캠페인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들이다. 부산의 경우, VHF는 채널7이 NHK, 채널 11이 NBC, UHF는 채널24가 KTN, 그러나 부산지방의 VHF는 KBS 제2TV, 11채널은 MBC가 막고 있으며 UHF24채널은 KBS 제3TV가 방영되고 있다. 우리 방송의 방영시간에는 일본 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평일의 아침방송과 저녁방송 사이의 낮 시간은 “TV만 켜면 개봉

63) 『동아일보』 1981.7.7., ‘부산, 일본TV시청 많다’.

관의 화면민큼이나 선명하다”는 동대신동의 D전파사 주인 P시의 설명이다⁶⁴).

부산권(부산, 마산, 울산진해, 창원 등지)의 한국TV방송은 KBS1(채널9 또는 5), MBC(채널11), KBS3(UHF채널24) 등 4개. AFKN은 채널2에서 잡힌다. 부산에서 시청되는 두 나라의 TV방송의 채널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국 TV가 방영되는 시간에는 일본TV를 보기가 힘들다. 그러나 지역이나 날씨에 따라 두 나라의 방송이 겹쳐 보일 때도 없지 않다. 또 고장이나 정전으로 우리TV가 순간적으로 정파(停波)되면 그것이 복원될 때까지 부산의 시청자는 일본TV를 볼 수 밖에 없다⁶⁵).

이러한 1981년 무렵의 상황은 정부의 전파월경 차단대책이 활발히 추진, 시행되었던 1984년에도 별 반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당시 부산에서는 일본의 나가사키방송(NBC)이 KBS와 MBC와 더불어 ‘3대 방송’으로 손꼽힐 정도였다⁶⁶). 그만큼 부산민들에게 일본 TV방송은 한국의 국내방송이 제공해 주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부산시가 1984년 4월 일본방송수신용 안테나설치수를 조사하면서 분석한 일본방송 시청자의 유형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1) 일본어를 해득할 수 있는 계층 또는 중류생활 이상의 가정에서 뉴스 오락물 스포츠중계를 시청하는 경우, 2) 호텔, 여관 등에서 고객유치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3) 학생, 회사원들의 일본어교육용, 4) 무역상사 등의 시장정보와 새 상품정보 등 정보수집용, 5) 4,50대 이상 노년 및 주부들이 소일거리로 설치한 경우 등이었다⁶⁷). 심지어, 다

64) 『경향신문』 1981.8.12., ‘일본 그림자(2): 부산항의 TV오염’.

65) 『동아일보』 1981.7.7., ‘부산, 일본TV시청 많다’.

66) 『동아일보』 1984.10.19., ‘日本바람’이 부는가 <1> 港都釜山에 ‘소리’가 울린다’.

67) 『동아일보』 1984.10.22., ‘日本바람’이 부는가 <3> ‘釜山안방’에 ‘演歌’ 흐른다’.

음의 신문기사에서처럼 어떤 이는 일본의 일기예보가 한국의 그것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일본방송을 시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 태종대 근처의 주민은 밤늦게 또는 우리TV가 방영되지 않는 낮 시간에 일본TV를 본다고 말했다. **“더 재미있어요. 일기예보와 같은 프로는 우리의 것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정확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우리TV 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지요”**라고 일본TV를 보는 이유를 밝혔다⁶⁸⁾.

이와 같이 일본TV방송의 전파유통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었던 부산이라는 주변의 ‘경계적 공간’ 안에서, 부산민들은 일종의 대체재(代替財)나 보완재(補完財)로서 일본TV방송 콘텐츠를 일상적으로 소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지역적으로 특수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적 경험은 정부와 주류 언론의 ‘왜색문화의 온상’이라는 ‘도덕적 낙인찍기’를 의문시하고 기존의 사고틀에서 벗어난 대안적 인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제3의 TV채널’이 향도 속의 일본색을 더욱 짙게 한다. 부산에서는 일본NTV방송은 KBS, MBC와 더불어 ‘3대 방송’으로 꼽힌다. 주요 관광호텔에선 ‘채널5’ 등으로 공식화해 놓은 지 오래고, 오락, 어린이 프로 등 정규프로그램은 물론 CM까지 누가 누구를 흉내 냈는지 모를 정도로 내용이나 편성시간대가 똑같다. 머리 비듬약 CM에서 ‘베토벤’이 머리를 긁는 장면, 우리는 오랜 친구 ‘장우(長友)’운운은 일본의 완전복사판. **국내TV 프로제작관계자들이 부산으로 출장 와 일본 것을 배워 나간다는 얘기가 실감 난다**⁶⁹⁾.

68) 『동아일보』 1981.7.7., ‘부산, 일본TV시청 많다’.

위의 기사는 주류언론의 ‘도덕적 낙인’의 프레임 내에 쓰여 지긴 했으나, 경계적 사고의 흔적을 보여준다. 즉, ‘누가 누구를 흉내 냈는지 모를 정도로’ 한국의 방송콘텐츠가 일본방송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음의 신문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방송콘텐츠를 베끼는 한국 방송콘텐츠의 질(質)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으로 이어진다.

서구 암남동 ○○○ 씨도 “새로운 일본TV프로그램이 나온 지 늦어도 6개월이면 우리나라 TV에서도 똑같은 방송이 나오더라”며 TV 광고의 경우도 새로운 일본광고가 나오면 우리쪽 에서도 6개월 만에 비슷한 광고를 내보낸다고 꼬집는다. 실제로 우리 방송에서 나가고 있는 「출발 동서남북」이나 「맛자랑 멋자랑」, 「드라마게임」, 「전국노래자랑」 등과 과거 방송됐던 「행운의 청춘열차」 「청춘 만세」 「돌이서한마음」 등은 **일본방송과 똑같다고 부산 시민들은 말한다**.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간난이」 「남매」도 일본TV드라마 「오신」를 본 뜬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광고에서도 「베토벤」를 모델로 등장시킨 탈모방지약 광고나 두유광고 등이 일본광고와 똑같은 것은 물론이고 화장품이나 과자 음료 광고 등도 일본 것과 너무 비슷하다는 지적들이다⁷⁰).

이와 같이 다른 지역 사람들과 달리 일상적 경험을 통해 이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부산민들에게 정부와 주류언론의 ‘도덕적 낙인’은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주류 언론의 도덕적 비난에 대한 실제 부산 시민들의 반응은 “일본방송을 본다고 맹목적으로 일본 문화에 젖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나라 방송도 일본 것을 모방하므로 결국 전

69) 『동아일보』 1984.10.19., ‘日本(일본)바람」이 부는가 <1> 港都釜山(항도부산)에 「소리」가 울린다.

70) 『동아일보』, 위의 기사.

국민이 일본방송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인데 굳이 부산시민만 일본방송을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反)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으로 비롯된 부산민의 경계적 경험은 '한국 방송콘텐츠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대안적 인식으로 이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하나의 '경계적 공간'으로서 부산은 탈식민 이후 일본과의 현대적인 경계를 실질적인 것으로 실감하게 하는 공간이었다. 일본과의 인접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부산은 해방 후에도 '이웃하는 정치체제에 의해 문화적으로 흡수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매우 비근한 감각으로 존재하는 도시공간이자 현대적인 미디어현상으로서의 일본 대중문화 금지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일상공간이었다⁷¹⁾. 따라서 탈식민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던 일본방송의 전파월경은 국민국가 한국에게 있어서 단순한 기술적 현상이 아니라 문화정체성의 확보라는 차원의 정치적 현상이었다. 즉, 근대사회에서 국민국가가 국민통합을 위한 목적에서 방송의 주된 역할을 국민에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으로 방송전파의 전국적 확장을 시도하는 것 그 자체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다⁷²⁾.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구도 속에서 부산은 민족문화의 훼손, 즉 '왜색문화의 온상'이라는 도덕적 낙인의 공간으로 반복적으로 재현되기 일췌였다.

71) 김성민, 앞의 책, 2017, 78쪽.

72) 윤상길, 『1960년대 중후반기 박정희 정부의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63-1, 2019, 52쪽.

조르시오 아감벤의 표현대로라면, 부산은 대한민국이라는 체계의 바깥에 놓여있기 보다는 오히려 체계의 문법에 의해 ‘유기되어(abandoned 있는 상태), ‘내부적 타자’였던 셈이다⁷³⁾. 그러는 사이, 부산지역에서의 일본방송 전파월경에 대한 실증적인 규명 또한 방기되어 있었다.

따라서 부산지역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이라는 현상을 기존의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한 걸음 비껴 나와 중립적인 관점에서 서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해 줄 자료인 국가기록원 문서를 발굴하고 이 자료를 중심으로 1980년대 부산지역 일본TV방송 전파월경의 객관적인 전체상을 정부의 대응책이라는 축과 부산지역 유선방송업계 및 부산시민의 반응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축을 통해 1970,80년대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을 살펴보려고 한 것은 전파월경이 만들어내는 경험이 특정한 국가의 역사적 맥락과 그 시공간을 관통하는 글로벌과 로컬의 역학에 의해 전혀 다른 인식과 감정을 생산해 낸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즉, 중심부 국가권력에 의한 문화정체성 전략(전파월경 대책)과,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었던 부산이라는 주변의 ‘경계적 공간’ 안에서 벌어졌던, 지역적으로 특수한 다수의 역사적 현실과 다양한 인간 경험 사이에는 일정정도 괴리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음을 감안한 연구전략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바, 1980년대에 걸쳐 정부는 일본의 방송전파가 한반도에 침투하여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언론의 공세에 대응하고자 했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송출방식의 변경이나 방송출력의 증대, 방송국이나 중계소를 확충하는 등의 기술적 대응과 일본TV방송을 중계하는 불법적인 유선TV방송사업자를 단속하거나 ‘일본방송안보기 운동’추진과 같은 행정적 대응을 하였다. 이러한

73) 아감벤, 조르조, 박진우역, 『호모 사케르 -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정부의 대책은 기본적으로 탈식민적인 문화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행된 다분히 정치적인 대책이자 대중처방적 대책이었다. 1984년 이후 집중적으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긴 했지만, 전파월경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내에서 수신되는 일본TV방송 전파의 전계강도를 낮추는 외교적 해결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 현상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탈식민지적 조건 속에서 일본의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화정책이 부재한 상황이었기에,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한 기술적·행정적 대응만으로는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는 부산 지역사회의 반응에서도 확인된다. 사실상 지리적으로 인접했던 탓에 사실상의 ‘일본의 방송권역’에 속했던 부산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컬러방송을 하고 있었던 일본TV의 방송콘텐츠가 기존의 수직편파방식의 안테나를 통한 시청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유선방송을 통한 시청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때문에 일본방송 콘텐츠 유입의 새로운 경로 중의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성립 불가능한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일본TV방송을 중계하는 유선TV방송이었고, 새로운 기술적 형태의 유선방송인 유선비디오방송 또한 최초로 부산에 등장하였다. 또한 1984년 10월 전파월경에 대한 정부대책의 일환으로 부산시에 의한 시행되었던 ‘일본TV 방송수신용 안테나 철거’는 그 단기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넓게 보면 오히려 부산지역의 시청자들을 일본방송을 중계하는 중계유선방송업자나 유선비디오방송업자로 유도하는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

‘주변’이란 결코 극단적인 ‘내던져짐’의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심의 언어로부터 이탈된 상황, 중심이 제시하는 규범적 언어를 외국어로 느끼게 되는 상황은 동시에 바로 그 주변부로부터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언어가 생겨나게 되는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경계로서의 주

변은 유연성과 그로 인한 창조적인 잠재력이 실현되는 공간인 것이다. 즉, 중심으로부터 소외된 채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체계의 바깥과 관계하는 영역, 외부의 새로움을 먼저 접하는 장소, 체제 내적이지 않은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다⁷⁴).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으로 비롯된 부산민의 경계적 경험은 새로운 인식이 탄생하는 원천이었다. 일본TV방송의 전파월경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었던 부산이라는 주변의 ‘경계적 공간’ 안에서, 부산민들은 일종의 대체재(代替財)나 보완재(補完財)로서 일본TV방송 콘텐츠를 일상적으로 소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지역적으로 특수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정부와 주류 언론의 ‘왜색문화의 온상’이라는 ‘도덕적 낙인찍기’를 의문시하고 기존의 사고틀에서 벗어나 한국 방송콘텐츠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대안적 인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중심-주변의 지정학을 세계방송사의 차원에서 보면, 일정정도 보편적인 법칙성을 도출할 수 있다. 역외(offshore) 해적방송이 BBC의 변화를 추동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1950년대 ‘해적’라디오 방송국은 영국 BBC가 청년문화의 부상에 대해 중년층적인(middle-aged) 반응을 보임으로써 생겨난 간극을 메웠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스무 개가 넘는 새로운 역외 라디오 방송국들이 생겨났고, 1965년 무렵 이들 중 몇몇 방송국이 젊은 수용자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뒤늦게 1967년 BBC는 해적방송국을 모방, 대부분 기존 해적라디오출신 DJ로 이루어진 방송국을 만들었는데, 이는 BBC라디오를 포괄적인(generic) 채널로 다시 조직하는 전반적 과정의 한 부분을 차지했었다⁷⁵).

74) 김수환, 「‘경계’ 개념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접근 - 구별의 원리에서 교환의 메커니즘으로」, 『기호학연구』 23, 2008, 506~507쪽.

본 연구의 결과와 영국 해적방송 및 BBC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주변과 지역의 창조적인 잠재력에 주목하는 더 많은 학술적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점이다. 그간 부산의 주변성과 경계성이 가져온 창조적 역할에 주목한 미디어 관련 연구가 없지는 않으나⁷⁶⁾, 좀 더 활발하게 부산이라는 경계적 공간을 매개로 전개되었던 여러 미디어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세계화 담론지형 속에서 일본대중문화 개방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⁷⁷⁾, 국가의 민족주의적 도덕공세 속에서 부산민의 경계적 경험이 탄생시킨 대안적 인식과 ‘대안’이 실제 ‘현실’로 구현되는 사회적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학술적 규명도 필요하다⁷⁸⁾.

75) Curran, J., *Media and Power*, Routledge, 2002, 김예란 정준희 역, 『미디어 파워』,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36쪽.

76) 최이숙, 『전후 1950년대 탈식민 도시 부산 그리고 라디오』, 『언론과 사회』 23-1, 2015. 윤상길·장일, 『초기 부산 노래방 문화 형성의 사회적 맥락과 매체사적 의미: 1980년대 가라오케 문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7, 2016 등.

77) 국가기록원 문서를 검색해 보면, 일본대중문화에 대응한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199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78) 그 규명의 단초는 민주화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정부문서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 정부(보고서)문서에서는 결론적으로 “일본문화 침투라는 봉쇄 측면보다는 개방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국문화 선별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 위성방송을 조기 발사하여 고품질의 TV방송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급은 부산민의 경계적 경험이 탄생시킨 대안적 인식이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국가기록원문서 DA1259648, 『일본 위성방송 국내 시청에 대한 검토』, 『일본TV 혼신』, 연도미상).

| 참고문헌 |

- 김명옥, 『韓國 CATV導入活性化를 위한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김성민, 『일본을禁하다: 금제와 욕망의 한국대중문화사, 1945-2004』, 글항아리, 2017.
- 김수환, 「‘경계’ 개념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접근 - 구별의 원리에서 교환의 메커니즘으로」, 『기호학연구』 23, 2008.
- 박재용, 『한국 초기민간상업방송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송재극·최순룡, 방송문화진흥회 편, 『한국방송기술사』, 『한국방송총람』, 나남, 1991.
- 아감벤, 조르조,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 주권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 윤상길, 1980년대 전반기 한국 유선비디오방송 ‘봄’의 미디어사적 맥락, 『언론정보연구』 57-1, 2020.
- _____, 「1970년대 한국 유선방송의 이행기적 양상」, 『언론정보연구』 56-1, 2019.
- _____, 「1950년대 서울중앙방송국 대외방송의 전개과정」, 『언론정보연구』 56-4, 2019.
- _____, 「1960년대 중후반기 박정희 정부의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63-1, 2019.
- 윤상길·장일, 「초기 부산 노래방 문화 형성의 사회적 맥락과 매체사적 의미: 1980년대 가라오케 문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7, 2016.
- 이상원, 『國際 直接衛星 放送의 電波越境에 대한 國際法的 統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와부치 고이치 저, 히라타 유키에·전오경 역,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2004.
- 조항제, 「방송산업의 성장과정」, 『한국 언론산업의 역사와 구조』, 연암사, 2000.
- 최이숙, 「전후 1950년대 탈식민 도시 부산 그리고 라디오」, 『언론과 사회』 23-1, 2015.
- 최창봉, 「외국TV가 한국TV에 미친 영향」, 『우리 문화의 진단과 반성』, 문예기술사, 1985.
- 최창섭, 『방송원론』, 나남, 1985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편, 『방송용어사전』, 한국방송개발원, 1990.
吉見俊哉, 『カルチュラル・スタディーズ：思考のフロンティア』, 岩波書店, 2000,
박광현 역, 『문화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Curran, J., Media and Power, Routledge, 2002. 김예란·정준희 역, 『미디어 파워』,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투고일 : 2020. 05. 18. 심사완료일 : 2020. 06. 24. 게재 확정일 : 2020. 07. 08.
--

| Abstract |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 to the Spill-over
of Japanese TV Broadcasting in the 1980s and the Response
of Busan Society

Yoon, Sang-Kil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objective overall picture of the spill-over of Japanese TV Broadcasting in Busan of the 1980s, focusing on two main pillars: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 to the spill-over of Japanese TV broadcasting and the responses of Busan's cable broadcasting industry and Busan citizens. As can be seen from this study, the government tried to respond to the media's offensive in the 1980s that Japanese TV broadcasting waves were infiltrat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reatening Korea's cultural identity. As part of its measures, the government took technical measures such as changing the transmission method, increasing broadcasting output, and expanding broadcasting stations, as well as cracking down on illegal cable TV operators that broadcast Japanese TV or promoting the campaign of 'Don't Watching Japanese TV Broadcasting Movement'. However, due to the absence of a more fundamental cultural policy on Japanese mass culture contents amid de-colonialistic conditions,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responses aimed at blocking the spill-over of Japanese TV broadcasting were not enough to prevent the spill-over of Japanese TV broadcasting. This gap is especially evident in the reaction of the Busan community.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phenomena was the consumption of broadcasting contents through cable TV in Busan, which is much more active than other regions,

and the other was the emergence of a new perception of Korean broadcasting reality stemming from the peripheral circumstances. And it is understood that the alternative perception created by the Busan people's boundary experience contributed to policy discussions on the opening of Japanese mass culture in the 1990s.

Keywords: Spill-over, Busan, Boundary Space, Cultural Identity, Cable TV